

■ 국회 '독도·금강산' 대정부 긴급 질의

“영토 주권도 지키지 못한 게 실용외교냐”

◇이명박 정부 외교 정책 질타=야권은 현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에 대해 ‘급진 외교’ ‘실종외교’ ‘쪽박외교’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과거사를 지나쳐 버리겠다며 영토 주권 하나 지키지 못한 게 실용외교의 결실인가”라고,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외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골대 구분도 못한 채 자살골을 넣었다”고 각각 지적했다.

국회는 21일 독도 영유권과 금강산 총격사건에 대한 대정부 긴급 현안질의를 갖고 정부의 대일 외교와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사태가 이명박 정부가 펼쳐온 잘못된 ‘실용외교’와 강경 대북기조가 자초한 일이라며 여권에 집중 포화를 날렸다. 하지만 여야는 전·현 정부 책임론과 해법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與野 “MB 외교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대북 강경책이 금강산 피격 사건 불러

동북아역사재단이 7월1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은 이미 결정돼 있다’는 골자의 보고서를 낸 사실도 들어가며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금강산 사태 원인과 처방 제 일 맞대로=한나라당은 지난 정권 탓을 하는가 하면 북한 내부 상황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대북 강경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황진하 의원은 “남북대화의 경색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 아닌 북한의 내부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성진 의원은 “눈 앞의 이익에만 매몰된 채 북측을 용인한 지난 10년의 대북 무장해제 정책이 문제”라며 과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표현을 포함시켜 안보의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이 정책은 북한 입장에서 흡수통일론으로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도발적”이라며 대북 강경기조 폐지를 요구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은 “현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타령에 매몰돼 지난 정부 10년의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것은 민족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남북대화재널 복원을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체제 위협국가는 북한”

이상희 국방장관 밝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1일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가 어디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주적(主敵)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군에서는 북한을 ‘현시적인’ 적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쓰느냐 안 쓰느냐와 지금과 같이 심대한 위협이 현실적 실체인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것이 불필요한 내부적인 논쟁이 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북한 초병이 조준사격을 했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면서 “사실 계획이 의도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없지만 첫째 탄도 소지 말아야 했고 두번째 탄은 더더욱 소지 말아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권총과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지난 1999년 체결한 신(新)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재검토 의향을 묻는 한나라당 정욱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는 어업협정 개정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일에 끌려간 어선 올해만 14척

일본의 교과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사태로 한일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한일 어업협정 위반을 이유로 끌려간 우리 어선이 올해 들어서만 14척에 달해 ‘과잉 단속’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우리 어선 14척이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등에 나포돼 일본까지 끌려갔다 2~3일 뒤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를 가운데 대부분인 11척의 나포 이유는 조업 조건 및 규칙 위반이었다. 이밖에 ▲일본 배타적 수역내 정해진 조업구역을 벗어난 어선 등도 각각 한 척씩 끌려갔다. 나포된 우리 어선들은 대부분 2~3일내 한 척당 200~300만원의 담보금을 물고 풀려나 한국으로 돌아온다. 일본은 이후 약식 재판을 통해 이 담보금만큼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국고에 귀속시킨다. 99년 2차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일본은 모두 198척의 우리 어선을 잡아갔다. 반면 우리는 일본 어선을 어업협정 위반으로 나포한 사례는 15척에 불과하다. 2004년이후로는 아예 나포 실적이 없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

정부, 입주기업 간담회  
정부가 당국간 대화 단절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은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김영탁 통일부 개성공단지원담당장은 21일 서울 한 식당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금강산 사건으로 관광객 안전보장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 재

통일부 “北 17세 여군 총격설 확인중”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관련, 고 박왕자 씨에게 총을 쓴 북한군이 17세 여군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21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합동조사단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입증된 바 없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보도내용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즉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은 주장이 어디서 제기되었는지 등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계속 조사해 나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박 씨에게 총격을 가한 북한군이 입대할 지 얼마 안 된 17세 여성”이라며 “북한도 우발적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당황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북한이 심지어 중국 내 한국 체널을 통해서도 내부의 당황스러운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한국 민간단체들에 7.8월 중 백두산 관광과 아리랑 공연 등에 대규모 참관단을 보내 줄 것도 타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금강산·개성 점검단, 정부 대책반서 분리키로

정부, 진상 규명과 현대아산 조사 별개로 운영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정부 합동대책반과 금강산·개성관광 사업 점검 평가단을 분리해 운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대책반과 금강산·개성관광 사업 점검 평가단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립됐다”면서 “점검 평가단의 진행 상황은 평가단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사건의 진상 규명 및 대북 조치와 현대아산을 대상으로 한 개성·금강산 관광 사업 관련 조사를 별도 트랙에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는 곧 현대아산의 대북사업과 관련한 법 정부 차원의 조사가 개성관광 중단으로 가는 수순이자, 대북 압박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난 11일 사

Advertisement for '대리점 모집' (Franchise Recruitment) for a food service business. It features images of various food items and a large stainless steel food service cart. Text includes '대리점 모집', '한국민간단체들', and '527-3388'.

Advertisement for '재혼만 10년!' (Remarriage only 10 years!). It features a smiling couple holding a bouquet of red roses. Text includes '재혼만 10년!', '행복물결', and '527-3388'.